



**우리는 행복한
노후를 꿈꿀
권리가 있다**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과 함께
하는 노후불안 처방전

목차

우리의 노후, 어떻게 하죠 ————— 02

당신의 노후는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노인들의 안타까운 현실
국가가 책임지는 노후, 가능할까요?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오해와 진실 ————— 09

국민연금, 꼭 필요한가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층에게 유리한가요?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나요?
국민연금, 받을 수 있는거죠?
기초노령연금은 또 뭔가요?

연금제도 이렇게 달라져야 합니다 ————— 23

적절한 소득대체율 보장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국민연금 국가지급의무 법제화, 국가재정 확충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기금은 사회적책임투자를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기금은 공공복지인프라에 투자해야 합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모두에게 확대 지급되어야 합니다

“나도 늙고 너도 늙고, 우리는 모두 늙어요”
“부모님 노후는 어떻게 하죠?”
“애 키우다 보면, 내 노후 대비는 꿈도 못 꾸는데”
“100세 시대라는데, 어떻게 살죠? 막막해요”

Old Man in Sorrow
(On the Threshold of Eternity)
Vincent van Gogh 1890



노후의 꿈이 무엇인가요?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며 동네
마실을 다니고 가끔 찾아오는
손자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행복한 노후를 꿈꾸고 계십니까?
책을 읽고 등산과 낚시를 즐기며
가끔 여행도 다니고 싶다고요.
그렇다면, 당신은 노후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당신의 노후는 안녕하십니까?



70.6% 노후, 경제적으로 불안

출처: 한겨레21(2013.2.25. 제949호)
성인 3604명 대상 설문조사

40.2% 경제적 어려움

39.8% 건강문제

노인이 겪는 가장 어려운 문제
출처: 통계청, 고령자 통계(2012)

33만원이면
용돈이 되겠습니까
아버지?

고맙다
내 친구들도
그 정도
받는대더라

양가 부모님
용돈 70만원..
내 노후는 언제
대비하지?

아이고
미안하다

부모님 용돈은 얼마나 드리나요?
은퇴한 부모의 54.6% 자녀에게서
한 달 평균 33만원 용돈을 받음.
출처: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2012.10)

우리 부모님은 노후를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가요? 부모님께 용돈은 얼마나 드리고 계십니까?

평균수명은 늘어나는 반면, 과거에 비해 자녀수가 급속하게 줄었기 때문에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자녀들의 부담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고용시장과 양극화로 청장년층이 고통 받는 현실에서 부모부양의 부담은 더욱 무거운 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노후가 안정되지 않으면 그로 인한 부담은 현재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세대, 중년세대에게 고스란히 돌아옵니다. 이미 젊

은 세대들이 부모세대의 노후부양과 자녀세대의 양육부담으로 본인의 노후대비는 꿈도 꾸지 못하며, 연애, 결혼, 출산마저 포기하는 이른바 '3포 세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부양으로 인한 부담은 가난한 가정에게 더욱 무거운 짐이 되어 우리사회의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노후는 먼 이야기도, 남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노인들의 안타까운 현실

한국의 70세 이상 노인 자살률 **84명** (10만명당)

한국의 평균 자살률 **32명**

노인 자살률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
출처 : 통계청, <2011년 사망원인통계>, WTO 2010년 자료 등

11명
OECD 평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고령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노인들의 현실은 매우 암울합니다.

노인빈곤율은 45%에 이르러, OECD 국가 중 1위이고, OECD 평균에 비해 약 3.3배에 달합니다. 70세 이상 노인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84.4명으로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이고, 우리나라 평균 자살율의 2.5배에 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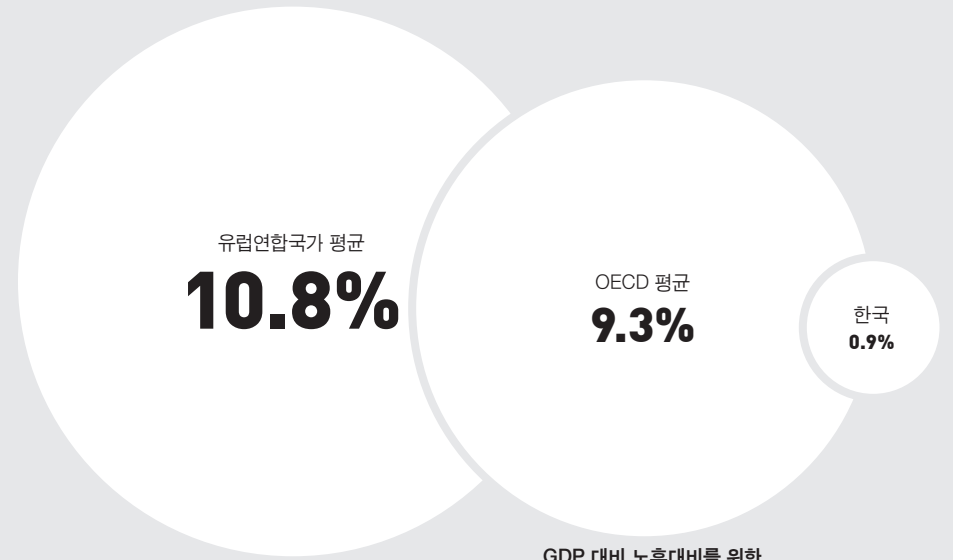
높은 노인빈곤율과 자살률은 우리나라 노인들이 처한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인 100명 중 빈곤인구 비율
OECD 30개 회원국 중 한국 1위
중위소득 50%미만 가구 비율

출처 : OECD, <Pensions at a Glance>(2009)

국가가 책임지는 노후, 가능할까요?



GDP 대비 노후대비를 위한
공적지출 비교 (2010)
출처 OECD, Pension Outlook (2012)



클라우스, 68세, 독일
매달 280만원 상당의
연금을 받는다

헬렌, 68세, 캐나다
매달 120만원 상당의
기초연금과 보조금을 받는다

출처 EBS 다큐멘터리
행복의 조건, 복지국가를 가다
6부 노후 (2013. 1. 23. 방영)

노후에 대한 공적지출, OECD 국가 중 꼴찌

그렇다면 우리나라 노인들의 안타까운 현실은 어쩔 수 없는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많은 국가들은 노인문제를 국가의 문제로 보고 국가재정으로 노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 OECD 28개국은 연금으로 GDP대비 평균 9.3%를 지출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현재 공적연금 지출액이 GDP대비 0.9%에 불과합니다. 우리 사회의 노인들에게 적절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 있습니다. 많은 복지국가들은 이 비용의 많은 부분을 국가가 보장하고, 우리나라는 개인이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가 책임지는 노후, 가능합니다.

이미 많은 복지국가에서는 공적연금이 뒷받침이 되는 국가의 책임에 의한 노후보장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빈곤율이 높은 국가들도 노인 빈곤율이 낮은 것을 보면, 노후빈곤은 불가피한 문제가 아니라 사회정책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제도의 개선과 변화를 통하여 국가가 책임지는 노후는 실현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책임지는 노후는 공적연금을 통해서 실현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오해와 진실

국민연금, 꼭 필요한가요?

세계의 공적연금

미국의 공적연금
OASDI : 1억 5,760만명,
경제활동인구 94% 가입
(2009년 기준)



캐나다의 공적연금제도 :
비기여방식의 OAS(모든
국민에게 정액의 연금지급)/
GIS와 기여방식의 CPP/QPP
로 구성. 노인들 중 CPP/
QPP 수급자 비중이 90%가
넘어서고, 공적연금을 통한
평균 소득대체율이 60~70%에
이르는 수준.



스웨덴의 공적연금제도
: 전체 공적연금
수급자는 61세 이상
노인인구의 85.5%

독일의 공적연금제도
: 65세 이상 노인 중
공적연금수급율
100%에 가까움.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를 위하여 국가에서 시행하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하였다가 은퇴 이후 또는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본인 또는 유족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하여 연금제도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세계 170개국에서 국가가 노후를 보장하는 공적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선진국은 이미 대부분의 노인들이 공적연금으로 노후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은 사회연대의 정신을 기반으로 하며, 노후생활보장의 기본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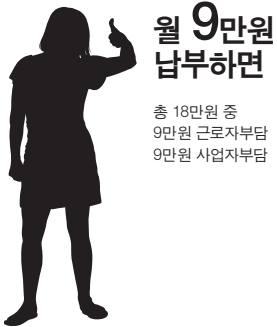
사람은 누구나 노년기를 맞습니다. 경제활동에서 은퇴하게 되면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개인 또는 사회의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핵가족화, 가족내 부양의 한계, 낮은 출산율, 늘어나는 수명, 정체된 경제성장률 등 사회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노후의 삶을 개인 또는 가족의 도움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적연금제도를 통해서 사회적 차원에서 노인부양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제도는 내가 낸 보험료를 내가 받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내고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지금 은퇴한 부모세대를 부양하는데 쓰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가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우리 세대를 부양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이러한 세대 간의 연대를 기반으로 한 제도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사회적 연대를 통하여 공동으로 노후에 대처하는 연대의 정신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수령액의 절반은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을 기반으로 산정되어 저소득층에게 더욱 유리하게 운영되며 사회 불평등을 일정 부분 해소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물가상승분을 반영하고, 소득대체율은 소득계층별로 다르게 책정된다는 점에서 민간보험과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연금액을 계산할 때 물가상승분을 반영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의 기본이 됩니다. 또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소득계층별로 다릅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전체가입자들의 평균소득액을 기준으로 책정하며, 소득이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액 이하인 경우 소득대체율이 높고, 반대로 소득이 평균소득액 이상인 경우 소득대체율이 낮아집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월 9만원 납부하면

총 18만원 중
9만원 근로자부담
9만원 사업자부담

2013년 금잔디씨(25세)
월 소득 200만원

월 80만원 연금을 받아요

물가상승률 반영
현재가치기준
2028년 이후 수령시



2053년 금잔디씨(65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국민연금은 소득의 일부분을 미리 납입하고 노인이 되었을 때 매월 일정금액을 받기 때문에 실제 얼마를 받는지 쉽게 표현하기 위해 **소득대체율**을 자주 사용합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지급률)이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가입자가 본인의 소득에 비례해서 납부한 보험료와 대비하여, 노후에 소득의 몇 퍼센트를 연금으로 지급받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본인 소득의 9%를 40년 동안 보험료로 납부하면, 본인 소득의 50%(2008년 기준) ~ 40%(2028년 부터)을 지급받습니다. 예를 들면, 금잔디씨의 월소득이 20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매월 보험료를 18만원씩(직장가입자인 경우 사업주가 9만 원, 금잔디씨가 9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40년간 납부하였다면, 금잔디씨는 65세부터 200만원의 40%인 월 80만원(2028년 이후 수령하는 경우)의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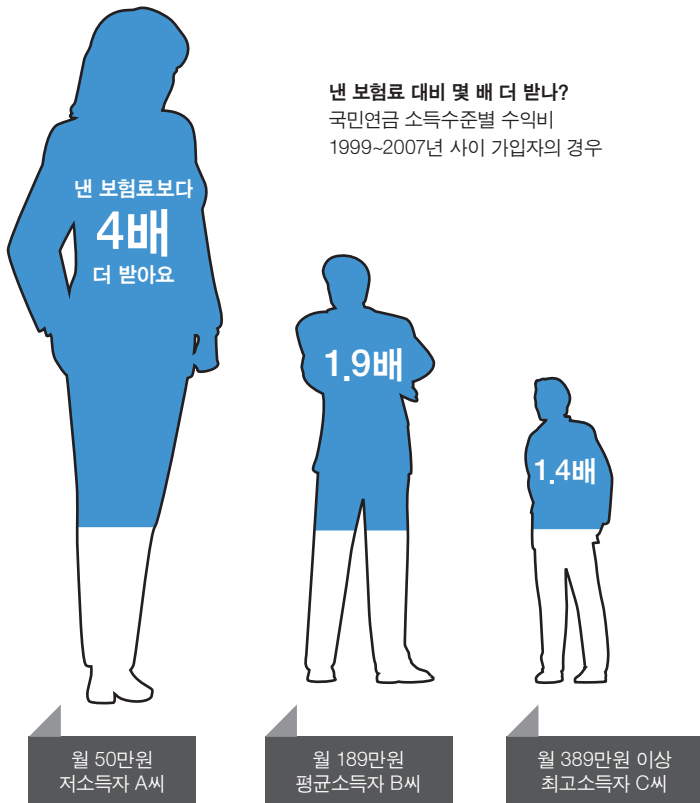
국민연금으로 어느 정도의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지금의 소득대체율은 적당한 것일까요? 65세까지 40년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을까요? 설사 40년간 납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소득대체율 40%로는 노후의 삶을 품위있게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소득대체율이 낮을 경우 민간보험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거나 노후를 위한 자산을 마련해 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민간보험은 해약률이 매우 높고, 부동산, 자영업 등을 통해 자산을 마련하는 것 또한 노후소득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이 더 이상 하락하게 되면, 공적연금의 존재의미는 사라지고 국민들은 사보험 시장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국민연금제도가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 소득대체율은 더 이상 하락되어서는 안됩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 연금제도 이렇게 달라져야 합니다1 (p.24)를 보세요!

저소득층에게 유리한가요?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



국민연금은 저소득층에게 더욱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더 유리하게 설계된 친서민적 노후 소득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수령액의 절반은 균등부분(A값)으로, 나머지 절반은 자신의 평균소득액(B값)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평균소득보다 낮은 가입자들은 소득대체율이 높고, 평균소득보다 높은 가입자들은 소득대체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저소득층에게 더욱 유리한 제도로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을 일정 부분 해소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액 산정공식 = $1.2 \times (A+B) \times (1+0.05n) / 12$ 개월

- A :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 B : 국민연금 가입기간동안 자기 소득 평균액
- n : 20년 이상을 초과하여 가입한 개월 수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사회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노동유연화 정책으로 인한 비정규직 양산, 재벌의 독점에 의한 중소기업인의 몰락으로 우리나라의 소득 양극화와 불평등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부유한 노인들은 여유로운 노년을 보낼 수 있는 반면, 가난한 노인들은 무연금 또는 저연금으로 심각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어, 노후에 있어서 소득 불평등의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국민연금은 사적연금이 하지 못하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통하여 갈수록 심각해지는 사회양극화를 치유하는 사회보험으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제도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 연금제도 이렇게 달라져야 합니다2 (p.26)을 보세요!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되나요?

기금고갈 주장의 함정



많은 젊은이들이 연금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의심한다. 그래서 보험료 납부에 부정적이다.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을 못 받는다?

많은 국민들이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되면 노인이 되었을 때 연금을 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걱정합니다. 많은 언론과 민간보험회사들은 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국민연금제도가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고 믿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국민연금제도의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수정할 수 있는지 명백하고 투명한 답변을 원합니다. 우리는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국민들의 걱정을 덜기 위해 쉽게 설명해보고자 합니다.

연금 고갈이 아니라 적립금의 규모축소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고요? 국민연금은 본래 기금이 소진되는 것으로 설계된 수정적립 또는 수정부과방식입니다. 많은 나라들은 이미 연금 기금이 고갈된 상태입니다. 120년 넘게 공적연금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는 독일도 제도도입 초기에는 적립기금이 쌓아두는 **적립방식**이었으나, 인구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부과방식**으로 전환하였으며 현재는 불과 10일치의 지급준비금을 쌓아 놓고 있을 뿐입니다.

적립금이 지나치게 많은 것도 문제입니다. 대규모의 적립금을 연금지급을 위해 단기간에 현금화할 경우 연금의 구매력이나 자산가치의 하락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 공적 연금을 운용해 온 서구국가들은 서서히 적립금의 규모를 줄여 부과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립금을 지나치게 쌓아두는 것보다는 적절한 운용을 통하여 부과방식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1. **수정적립 또는 수정부과방식** : 연금제도의 도입 초기에 급격하게 늘어나는 후세대(자녀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기에 적립금을 두다가 소진에 맞춰 부과방식을 전환하는 보완적 연금제도 방식
2. **적립방식** : 개인이 받을 연금액을 확정해놓고 이를 위해 미리 적립하는 방식으로 상당한 적립기금을 가지고 있다.
3. **부과방식** : 별도의 적립기금 없이 그 해에 필요한 노령연금 지급액을 가입자에게 부과하는 보험료나 세금으로 조달하는 방식

국민연금, 받을 수 있는거죠?

413조원



국가별 국민연금 적립금 규모 비교
GDP 대비 공적연금 자산규모 (%)



SPAIN
4.5%



FRANCE
1.9%



DENMARK
0.3%



국민연금기금이 소진되어도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GDP 대비 31%가 넘는 400조에 달하는 적립금이 쌓여 있으며 향후 50년 동안의 지급준비금이 쌓여있습니다.

공적연금제도는 세계 약 170개국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지급불능이 된 사례는 없습니다. 최근 그리스가 국가 부도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하지만, 공적연금은 지급되고 있습니다. 민간 회사는 경쟁에서 밀리거나 상품이 팔리지 않으면 부도가 나거나 폐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민간회사와 다르며, 국가가 소멸하지 않는 이상 안정적으로 지급됩니다.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적립금이 소진된 이후에는 보험료 수입보다 연금 지출액이 더 많으므로, 일부 모자라는 부분은 조세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제도의 개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연금제도가 성숙하지 못했고,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국가는 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프랑스, 독일, 이태리, 핀란드 등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한해 연금 지출 비용으로 GDP의 12~15%를 지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연금 지출비용은 GDP의 0.8%에 불과합니다.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는 2060년이 되어도 우리나라의 연금지출 규모는 GDP의 6.5%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우리 국민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오히려 연금지출을 늘려 노인빈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우리나라가 존속하는 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의 모자라는 부분은 국가재정으로 충당되어야 하며, 연금기금은 사회책임투자자와 공공복지 인프라 투자를 통하여, 국민들을 위하여 운영되어야 합니다.

연금제도 이렇게 달라져야 합니다 3,4,5 (p.28~33)를 보세요!

기초노령연금은 또 뭔가요?



2013년 기초노령연금
최대 월수령액
(노인 단독 가구)

기초노령연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도입 당시에 가입할 수 없었던 기존 노인세대부터 전업주부 등 적용제 외, 장기채납, 가입기피 등으로 인하여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에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초노령연금 도입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2007년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60%에서 40%로 대폭 축소되는 과정에서 낮아진 소득대체율을 보충하기 위해 국민연금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일정 소득을 보장하도록 제도화 되었습니다. 다만 재원마련에 대한 현실성과 고소득 노인에 대한 급여를 반대하는 여론을 반영하여 소득하위 70%의 노인(2012년 386만 명)에게 단계적(차등적)으로 A값의 10%(2013년 현재 가치 193,6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최근 가족 간 연대의식이 약화되고 자립적 노후를 선호하면서 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도 급속히 약화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불안정한 고용시장은 비정규직을 늘려갔고 이로 인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기간을 단축시키고, 어렵게 준비한 사적연금도 중도에 탈퇴하기 쉽습니다. 결국 기댈 자녀도, 노후를 위한 자산도 없는 국민에게 노후는 거대한 공포입니다. 적절한 기초연금을 보장하는 것은 노인뿐 아니라 나를 비롯한 부모를 부양해야하는 모든 자녀와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기초노령연금의 현재

2013년 4월 현재 노인 단독가구의 기초노령연금액은 최대 96,800원(부부가구 154,900원)으로 2013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 572,168원의 16.9%(2인 가구, 15.9%)에 불과합니다. 노후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도입된 기초노령연금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열악한 수준입니다. 그마저도 2011년을 기준으로 전체 노인 570만 명 중 실제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노인은 67%(380만 명)에 그쳐 23%의 노인은 어떤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법 부칙에 의해 “기초노령연금의 지급액을 2028년까지 A값의 10%로 단계적으로 인상” 하겠다고 정하였고, 이는 매년 0.25%씩 인상을 해야 하지만 2007년에 A값의 5%로 정해진 이후, 단 한번도 인상된 적이 없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기초노령연금의 실질적 기능을 위해서 급여의 2배 인상과 대상자 확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모두에게 확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연금제도 이렇게 달라져야 합니다 6 (p.34)을 보세요!

연금제도는
국민들의 노후를 제대로
보장하기 위하여
개선되어야 합니다

적절한 소득대체율 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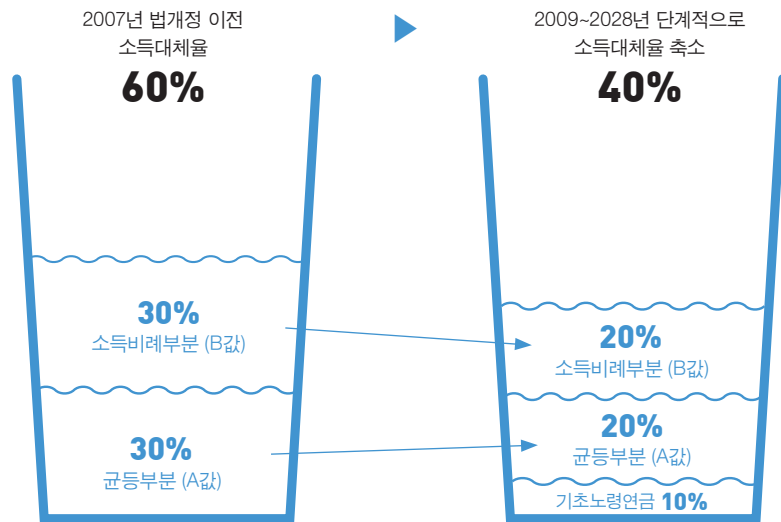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하락으로 연금의 급여가 매우 낮아졌습니다.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60%에서 40%로 급격하게 인하되었습니다. 더구나 40%의 소득대체율은 가입기간이 40년인 것을 전제로 하는데,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평균 근무기간이 25년을 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하면, 실질 소득대체율은 훨씬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을 25년으로 가정하면, 평균소득자의 소득대체율은 25% 수준으로 실제 받는 연금액이 1인 가구 최저생계비보다도 적은 수준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높은 급여수준을 기대하면서도 고부담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경제적 부담능력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국민들을 상대로 잦은 말바꾸기를 하며 불신을 키우기 보다는 국민연금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과 계획을 가지고 투명하게 운영을 하여야 합니다.

더 이상의 소득대체율 하락은 안 됩니다.

정부는 2013년 3월 28일 3차 재정추계발표에서 2044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60년에는 기금 적립금이 소진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서둘러서 연금급여를 삭감하는 등 연금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소득대체율로도 최저생계비 수준에 불과한 국민연금 급여를 더욱 삭감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노후소득보장으로써 국민연금제도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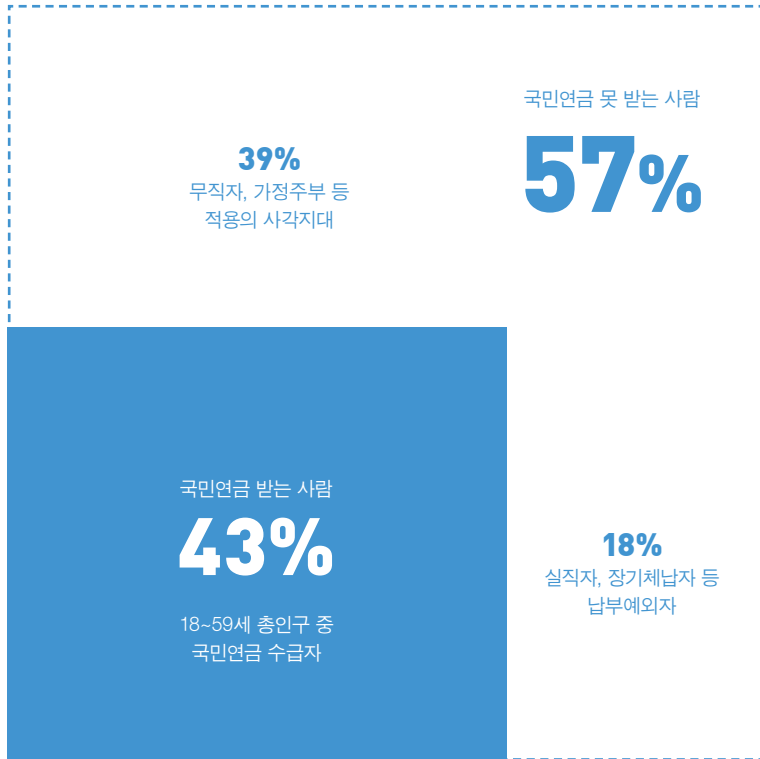
연금제도의 본래 목적은 바로 국가에 의한 노후소득보장을 통하여 노후빈곤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p.16 “기금고갈 주장의 함정”을 참고하세요) 적립금이 소진된다는 것은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의 변화에 불과하며, 연금의 지속가능성은 적립금의 규모보다는 그 시대의 세금을 부담할 노동인구의 확보(노동시장 참여율, 사회보험 가입률, 출산율의 제고)를 통한 사회적 지속가능성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기금고갈을 이유로 소득대체율을 낮추기보다는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강화하여 노후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연금제도가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소득대체율의 급격한 하락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하락으로 연금의 급여가 매우 낮아졌습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국민연금 사각지대
(2012. 12. 기준)



국민연금은 아직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처음 시행될 때는 1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들만 가입할 수 있었고, 1992년이 되어서야 5-9인 사업장 노동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군단위 지역에 있는 미가입 계층인 농어민, 자영업자,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가입할 수 있게 된 해는 1995년입니다. 그러다가 1999년 4월에는 도시지역에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속한 노동자와 자영업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명실 공히 전 국민 연금시대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연금제도는 1가구 1연금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는 소득활동을 하는 생계부양자, 즉 가장 위주의 가입구조입니다. 이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제도 도입 초기에는 기능을 했지만, 연금개혁과정을 거쳐 소득대체율이 낮아지면서 1가구당 1인의 연금수입으로 노후 생활을 하는 것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실제 연금이 필요한 저소득층 여성들은 대부분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노동자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규모가 전체 사업체수의 80%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영세한 산업구조 때문에 사각지대는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영세한 규모의 사업주는 사용자측 부담금이 부담되어서, 저소득 노동자들은 당장의 생활고 때문에 월 지출금액이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해서 보험가입을 회피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또한 고용이 불안정하여 연금의 가입과 안정적인 납부가 어려운 비정규직 근로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바, 상당수의 비정규직 근로자도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사회보험 지원대상 확대하고 1인 1연금제도 도입으로, 사각지대가 해소되어야 합니다.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는 영세사업장 저임금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국가의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하여야 합니다.

또한 1가구 1연금이 아닌 1인 1연금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연금 적용제외자를 최소화하고,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하여 사회활동이 중단되는 여성을 위하여 출산 및 육아크레딧 제도를 확대하여야 합니다. 군복무, 실업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일시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크레딧 제도를 확대하고 활성화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국가지급의무 법제화, 국가재정 확충 필요합니다

공적노후지출 및 인구비 추계
출처: OECD, Pension Outlook (2012)

	2010		2050	
	GDP대비 공적노후지출	65세 이상 인구비	GDP대비 공적노후지출	65세 이상 인구비
한국	0.9	23.1	9.8	38.2
OECD평균	9.3	14.7	11.7	-

노후에 대한 공적지출, OECD 국가 중 꼴찌

기초노령연금을 모든 노인에게 A값의 10% 수준(지급의 2배)으로 지급한다고 가정하더라도, 2050년에 기초노령연금 총액은 GDP 대비 4.3%, 국민연금은 5.5% 수준 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한국의 노인 인구가 총인구의 38%로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2050년에도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규모를 합쳐 공적연금으로 지출이 예정된 비율은 GDP의 10%를 넘지 않습니다. 2010년 현재 OECD 가입국의 평균 노인인구비가 14.7%인 상황에서 공적연금은 GDP 대비 9.3%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 경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므로, 재정 부담을 이유로 제도의 축소를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오히려 공적연금의 지출이 적어 각 개인이 노인부양비의 대부분을 부담해야하며, 노인들의 대량 빈곤문제가 발생 될 것이 더욱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국민연금 국가지급 명문화! 연금에 대한 국가재정 확충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민들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가의 부담은 아직까지 지극히 미미한 수준이며, 급격한 노령화가 진행된 이후에도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 부담을 이유로 국가의 노후소득보장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OECD 최고인 높은 노인빈곤율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가재정을 확충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잠재부채가 증가해서 국가신용도를 떨어뜨린다는 핑계로 너무나 당연한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입법화” 조차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국제사회에서 공적연금에 대한 잠재부채는 국가신용도의 책정기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국 당장의 재정적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입법화와 연금에 대한 국가재정 확충이 시급합니다.

국민연금기금은 사회책임투자를 해야 합니다

2013년 국민연금기금이 400조 원을 넘었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 1,120조원 (2040년)까지 축적될 것으로 올 한해 정부예산이 약 340조 원인 것을 고려하면 엄청난 규모입니다. 미국과 일본에 이어 많은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은 60%가 채권에, 23%가 주식에 투자되어 80% 이상이 금융 부문에 몰려있습니다. 기금의 규모는 거대해지고 금융시장의 불안정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다른 투자대안은 없는 것일까요?

국민연금기금의 성격 : 신탁기금이 아닌 사회적 투자기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국민연금기금을 개인신탁기금과 동일한 차원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각자의 노후를 위해 개인들이 맡긴 기여금으로서 수익성 추구가 가장 중요한 임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기금의 투자 수익률만을 강조하게 되면, 국민들의 노후보장을 위한 연금기금이 노동자들과 대다수의 국민들의 이익과 상충되는 방식으로 운용될 수 있고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금기금이 투자한 회사가 환경을 파괴하거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대량해고를 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국민연금기금은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사회적 투자기금으로서 사회 성원들의 복지를 위해 연대 원리에 의해 형성되고 배분되는 기금으로 보고 사회책임투자를 해야 합니다.

‘사회책임투자’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기금의 투자대상을 선정할 때 기업의 재무상태 외에 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종합적인 투자방식입니다. 국민연금이 시장의 신뢰를 쌓고, 위험을 최소화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주로 투자종목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사회책임투자 기준을 적용해서 심사하는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미 공적연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영국, 호주,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많은 나라들이 사회책임기준을 마련하여 연금기금투자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사회책임투자,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국민연금기금의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에도 불구하고 연금의 사회적 의무와 책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1%에 불과한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펀드’는 공적연금기금인 국민연금의 사회적 책임 투자를 명목적으로만 수행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은 기금운용에 있어서 국제적 확립된 원칙인 사회책임투자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원칙을 제대로 이행하고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운용에 있어서 법적,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키거나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기업, 그리고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투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런 활동에 대한 제동을 걸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은 금융자산 및 대기업 일변도의 투자로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자원 배분에서도 문제가 있고, 최근에는 국민연금기금이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 주체인 기금운용본부는 사회책임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적용 가능한 투자기준을 마련하고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연금기금은 공공복지인프라에 투자해야 합니다

한국의 공공복지인프라 현황



공공임대주택 **5.0%**

자료 : 국토해양부, 임대주택재고(2012)



공공병원 **5.8%**

자료: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 비중추이(2012)



국공립 어린이집 **5.3%**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통계(2010)



국공립 노인요양시설 **2.6%**

자료: 보건복지부, 통계(2012)

내가 낸 국민연금이 공공복지인프라에 투자한다면 내 삶은 어떻게 바뀌나요?

국민연금기금은 대중이 모은 사회적 자본으로서 공적 사회보장 요구에 부응하도록 운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연금기금은 단기적 투자를 통한 시장수익뿐만 아니라 사회전체의 발전을 위해 건실한 경제성장과 고용률·출산율 증가에 기반을 둔 장기적 사회지속성을 추구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경제활동세대가 노령세대를 부양하는 체계로서 제도의 지속성을 유지하려면 현재와 미래의 근로세대가 충분한 부를 생산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지지기반을 제공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기금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공공병원, 공공임대주택, 국공립 노인요양 시설 등 공공영역에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복지인프라가 적절하게 확보될 수 있습니다. 공공병원, 공공요양원 확충을 통하여 노인세대에 대한 부양비용이 축소되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하여 양육부담이 줄어들면, 현재 청장년 세대들의 각종 부담은 줄어들며 출산율 제고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노동시장의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공공인프라는 투자대비 수익이 낮을 것 같은데, 문제가 없을까요?

현재 국민연금의 투자수익률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합니다.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한 공격적인 투자는 아직까지 높은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지만 전 세계가 계속되는 경제 불황을 겪고 있어 공격적 투자를 통한 수익률 증대를 계속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400조원에 이르는 국민연금기금의 규모를 고려하면 현재 국민연금의 공공복지인프라 투자는 극히 적은 액수입니다. 국민연금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연금 가입자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금융투자를 줄이고 획기적인 규모의 공공복지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공공인프라 투자를 통하여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충분한 부를 생산할 수 있는 사회적 지속가능성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모두에게 확대 지급되어야 합니다

기초연금의 현재와 개선안 비교

	현재	박근혜 후보 공약	박근혜 인수위 국정과제	시민사회단체 요구
지급액	5% 최대 96,800원	2배 인상	최대 20만원	2배 인상
A값	5% 2028년까지 10%	10%	10%	10%
대상	전체노인 70% 소득별 차등지급	모든 노인	모든 노인 소득별, 국민연금 가입기간별 차등지급	모든 노인

* A값이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입니다 (p.15 참조)

국민연금 수령자는 기초연금을 적게 받아도 되나요?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모든 노인에게 현재의 2배의 기초연금을 주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인수위 과정에서는 소득수준과 국민연금 가입여부와 기간 등을 고려해서 차등지급하겠다는 후퇴된 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개편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은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적게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기초연금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연금가입기간이 짧은 사람은 대다수는 고용이 불안정해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여성,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며, 이들에게 기초연금을 적게 지급하겠다는 것은 노후빈곤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낮추는 대신 불안한 노후소득을 일부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므로, 국민연금 가입을 이유로 기초노령연금을 적게 지급한다는 것은 제도도입의 취지에도 반합니다.

기초노령연금 누구나 or 일부 가난한 노인에게만

2011년 현재 전체 노인의 67%(380만 명)의 노인만이 지급받고 있고 이중에 38만명은 기초생활수급자로 기초노령연금과 중복지급이 되지 않으며, 소득에 따라 20,000원부터 98,600원까지 차등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도입취지가 노인들에게 노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제공하고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보완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은 65세 이상 전체 노인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노인빈곤율이 45%에 이르는 등 대다수의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일부 빈곤 노인에게 지급하는 방향은 노후문제의 적절한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을 하면 자산가의 재산은닉, 재산조사와 평가를 위한 행정비용 등 문제가 발생합니다. 부자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정서적 반감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과세와 공제를 통하여 세금으로 환수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을 소개합니다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은 국민연금 가입자, 노동자, 시민이 모두 함께 국민연금 개혁운동을 펼치는 연대체입니다. 2012년 10월 23일 전국의 21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은 시민의 입장에서 국민연금 제도를 재정립하고, 이미 실패가 드러난 금융시장주의에 휩쓸리지 않도록 바로 세우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공적연금제도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명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후의 삶은 우리 모두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노인에게 최소한의 삶이 보장되고, 세대간의 연대를 통해 적절한 소득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연금의 국가지급 명문화를 통해 국민들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나이가 400조원이 넘어 놀라운 속도로 늘어나는 국민연금기금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투자될 수 있도록 도와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세대와 현세대가 모두 만족하는 공적연금제도로 만들어 가는 것을 희망합니다.

함께한 행동

2012/08/16 간담회 : 국민연금제도 및 기금운용 대안 마련
2012/10/23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발족
2012/10/24 전광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규탄 성명 발표
2012/11/22 대선후보 3인의 국민연금 정책공약 비교 평가 발표
2013/01/28 기자회견 : 기초노령연금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 발표
2013/02/06 기자회견 : 반사회적 기업 규탄 및 이마트 투자 철회 촉구
2013/02/25 논평 : 박근혜 대통령 연금개편안 재논의 촉구
2013/02/27 논평 : 외환은행 주식교환에 대한 공익에 부합한 의결권 행사 촉구
2013/04/18 논평 : 국민연금 3차 장기재정전망에 대한 입장
2013/04/25 국민연금 주식투자 10%를 먼저 추진에 대한 입장 발표
2013/05/03 기자회견 : 국민연금 국가지급 의무화 입법 촉구
2013/05/23 국민연금공단 신입이사장 선임관련 입장 발표
2013/06/03 제1차 국민연금정책 연속토론회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법제화”
2013/06/18 기자회견: 기초연금공약 후퇴시도 규탄
2013/07/02 제2차 국민연금정책 연속토론회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진단과 대안”

집행위원장 정용건 (민주노총 전 부위원장)

정책위원장 김연명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무국장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노동팀장)

제안단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단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공공운수노조연맹, 국민연금노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복지국가사회복지연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주거연합,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청년유니온,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총 21개 단체)

편집위원 김남희 김다혜 김잔디 박차욱경 이경우 이재훈

국가에 의한 노후보장, 꿈이 아닙니다.
연금제도는 우리의 노력으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연금은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노후를 꿈꿀 권리가 있다

발행일 2013년 7월 2일 | 발행처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 |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본 책자는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에서 국민을 위한 노후소득보장제도 캠페인의 일환으로 제작하였습니다